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교육투자는 지역 살리는 최대 동력



김왕복

인구 유입이 없는 지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 유입이 그 시발점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해 본다.

지자체장들의 대부분이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치고 4년의 임기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정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규정이 무색하게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교육관련 공약을 하고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 이유는 뭘까? 지자체장들이 교육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인지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은 직접 표로 연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교육의 '열악지역'으로 불리던 경기도 화성시장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2002년 15억원에 불과하던 '학교 지원금'을 2006년 112억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렸다. 기숙사 건립과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을 꾸준히 해 온 결과 병점교의 경우 2010년 신입생 43%가 타지역에서 온 학생일 만큼 우수 학교로 변신하였다.

#2 서울시의 노원구청은 교육특구를 표방하고 있다. 구청장의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은 학생들의 학력 증진으로 연결되고 입소문을 탄 공교육 수준은 인구 유입을 초래하여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등 강북지역의 최고 명문 학교로 자리 잡았다.

교육 투자를 통해 지역 학교가 살아나면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발전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땀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한국 학부모들

은 우수 선생님과 여건이 좋은 학교를 찾아 거주 이전을 한다. 이 사실을 인지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을 꼽기 시작했다. 교육청에만 맡겨뒀던 교육을 지자체가 직접 챙기면서 교육지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지역의 현실은 어떤가? 한마디로 지자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열악하다. 2009년 전국 평균 지자체들의 1개 학교당 지원은 약 1억2300만원인데 반해 광주는 1908만원, 전남은 1억1920만원이다. 광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전남은 경기도의 1억7521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전국 최고 수준인 과천시 학교당 5억258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분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듯 지역 인구의 감소는 지역 경제 발전에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또한, 대표관료제 원리를 중시하는 현대 행정에서 지역 인구수는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된다. 대표관료제란 국민들의 인구적 특성과 유사하게 정부 관료를 구성하여 일반시민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 제정권을 갖는 국회의원과 수와 정책 결정 주도권을 쥔 고위 공무원 수를 지역 인구 비례에 맞춰 조정하는 원리다.

호남 인구는 해방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 인구

분포는 호남 18.4%, 영남 22.6%로 불과 4% 차이였다. 그런데 2007년에는 호남 10.4%, 영남 26.4%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 숫자도 호남 30명, 영남 68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영·호남 대결은 끝나고 충청·호남 대결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호남 인구는 520만 명으로 충청권의 500만 명에 약간 앞섰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충청권 인구는 5년 이내에 호남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유출만 있고 유입이 없는 지역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은 이 점에 유념하고 대승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 유입이 그 시발점이다. 합법적으로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원어민 교사 배치, 학교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급식, 학교급식 특성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교육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다' 또는 '교육 전담기관은 교육청이다'는 등 할거주의와 책임회피식 대처로는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해 본다.

<국립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인사 구태 반복되면 조직 개편 의미 없다

신임 대통령 실장에 임태희 노동고용부 장관이 내정되고 청와대 조직도 새롭게 개편됐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 국정기획수석을 없애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기획관과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참모진 인사를 매듭짓고 개각도 단행할 방침이다. 이미 경선전에 돌입한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정당대회를 갖고 새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새로 구성한다. 여권의 인적 쇄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 쇄신이 성과를 거두려면 조직개편보다 능력있는 인물들을 중용하는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중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리 간판을 바꿔봐도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현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도(度)를 넘어선지 오래다. 장·차관급 8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34명으로 42.5%를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13명(16.3%)에 그쳤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 고위직 인사 가운데 영남 출신이 25명(47.2%)이나 되는 반면 호남 출신은 7명(13.2%)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통령 고향 출신 권력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한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금융계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증언도 나와 특정지역 출신들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인사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논공행상 차원의 보은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쳐 능력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투명인사를 기대한다. 그래야 집권 후반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부실한 가드레일로 사고 막겠는가

지난 3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참사다.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 지주가 뿌리째 뽑혀 나간 사진을 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시공됐는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후진국형 대형 추락사고의 주범이 바로 '형식적인 가드레일'이란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

문제는 허수아비와 진배없는 부실한 가드레일이 광주·전남지역에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 시내 가드레일 실상을 점검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고가도로 등에 설치된 가드레일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하게

지나만 해도 구부러지는 가드레일로 발견됐다. 광산구 송정고가의 사정도 동운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부실한 가드레일이 동운고가와 송정고가 뿐이겠는가. 있으나마나 한 가드레일을 방치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인천대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 국형 대형 추락사고의 주범이 바로 '형식적인 가드레일'이란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

문제는 허수아비와 진배없는 부실한 가드레일이 광주·전남지역에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 시내 가드레일 실상을 점검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고가도로 등에 설치된 가드레일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하게

無等鼓

옛날부터 범죄자에게 신체에 직접 벌을 가하는 형벌이 많았다. 형벌의 목적을 교화나 치료라 아니라 징벌 자체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은 오래도록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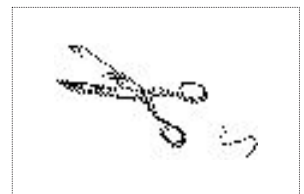
정약용이 지은 법률서 흡음신서에도 간강법을 때려죽인 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형에 처했다는 내용이 다수 나온다. 태종 이방원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숙빈조차 노비를 간강하려다 이마에 칼을 맞았으나 죄를 묻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다.

중국 고전에는 5가지 극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목숨을 뺏는 사형, 생식능력을 거세하는 궁형, 발뒤꿈치를 자르

는 율형, 코를 베는 의형, 살을 파낸 자리에 죄명을 찍는 경형 등 하나같이 끔찍하다.

궁형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고전 역사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다. 사마천은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한 장수를 변호하고 나섰다가 한무제의 진노를

거세



산 탓에 궁형을 당했지만 치욕을 참고 살아남아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체형이 흔히 등장한 신체형은 더욱 가혹했는데 간강은 교수형, 근친 간강은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고 유아 간강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을 선고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벌보다는 원칙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보완 및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주요 칼럼

조영대



최근 연일 보도되는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모 신문 사회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동 성대 강간범죄가 2006~2008년까지 3년간 89%나 늘었다고 한다. (2009년, 2010년 통계는 더 심각할 것이다)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급증한 가운데, 그중 강간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고(심지어 6세 이하 아동을 강간한 사건도 26건이나 된다) 한다.

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진실과 공동선을 신념으로 하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줄도 아는, 말하자면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살아가지고 노력할 때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됨의 자존심을 꽃피우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를 이루는 문화와 그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성(性)은 사랑하는 부부간에 상대의

아동 성폭력, 어찌할꼬!

인간이 어찌 그렇게도 약할 수 있을까? 천사처럼 해맑은 아이들에게 어찌 그렇게 음흉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너무도 가슴이 미어진다. 무엇이 그런 것을 저지르게 했을까?

행복을 위해 자신을 선물로 주는 성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고귀한 성(性)이 소유의 도구로 부정하게 악용되고 있다. 심지어 천사와 같은 어린 아이들까지 성 유희의 상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파렴치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의 정신병적 작태를 개탄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성과 인성, 양심과 책임감보다는 다분히 자신의 욕망 욕망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채우는 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려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이기주의의 가치관의 광배를 방치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일함이라고 본다.

우리가 소유의 노예가 될수록 동물화 되어 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공동책임을 느껴면서, 우리 자신부터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의 아름다운 존재성을 회복시켜가기 위해 노력해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보성성당 주임신부>

화물차 컨테이너 고정장치 미착용 단속 강화해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무법자라고들 부른다. 대부분의 트럭이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 달린다 보니 화물칸에서 밀로 떨어지던 물건들이 승용차를 덮치거나, 혹은 고속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그 뒤를 따르던 차량에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명을 앗는 일도 허다하다.

고정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정장치를 풀어서는 화물차가 커브를 돌 때 그것이 뒤뚱하며 차가 같이 넘어갈까봐 그런다는 것이다. 즉 그걸 안 채우면 짐만 날아가고 차는 그대로 있으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화물차의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화물차 파손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과 차량의 안전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1동

기고

김용환



역사적인 민선 5기의 막이 올랐다. 지난 시기도 중요하지만, 광주 경제의 도약을 위해 지금처럼 중요한 때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10여년이 광주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그래서 만난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 그리고 '수출 100억을 달성 도시'로 탈바꿈한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러한 경제 인프라·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광주 경제가 꽃을 피우 세계 속의 광주로 뻗어나

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민선 5기에서는 '5대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목표이다. 기존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디지털 정보산업, 광(光)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여 디젤자동차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그린폴드(금형)산업, 수소·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갈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광주 경제의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시기이기 때문이다.

민선 5기의 경제 비전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는 '2014년까지 경제규모에서 중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실 우리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22조 5000억 원 규모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1인당 GRDP 또한 1552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73.1%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다음으로 낮은 순위다.

민선 5기에는 현재 이러한 열악한 경제 규모 특히 GRDP를 광역시 중 중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과급효과가 큰 국내·외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과감한 인센티브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 확실한 투자유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아울러 안정적이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민선 5기에서는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간산업의 발전

연료전지산업, IT와 광(光) 융합 신산업, 디자인산업, 헬스케어산업 등 '미래 가치산업의 육성'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진 개방형 연구·산업화의 국제협력단지이자 녹색기술(GT)과 문화기술(CT)가 융합된 특성화된 특구로 조성되면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세계적 사이언스 파크로 육성될 것이다.

특히, 광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의 안정'이다. 광주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자금·인력·기술개발·관료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진출을 억제하며, 전통시장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추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 새 날이 밝았다. 광주가 우리나라 경제의 변방에서 그 중심으로 도약하는 시기도 멀지 않았으리라. 이를 위해서 노·사·민·정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사 회 2 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F A X 2200-661>
문 회 생 활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 례 매 체 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